

〈독재의 유혹〉과 〈시장의 유혹〉 사이에서 길을 찾다.

: (쉬즈위안, 김영문 역, 『독재의 유혹- 한 지식인의 중국 깊이 읽기』, 글항아리, 2012)

이홍규*

중국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중국 정치체제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체제도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붕괴하고 중국도 민주화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난 “중국인들이 정치체제의 붕괴를 바랄까요?”라고 반문하곤 한다. 공산당 일당체제의 붕괴와 함께 경제사회적 불안정과 분열 그리고 국력의 급격한 쇠퇴가 야기된 러시아의 전례를 똑똑히 지켜봤던 중국인들의 불안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불안감은 사실 뿌리가 깊다.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한 중화 제국의 붕괴와 반(半)식민지로의 전락, 군벌의 난립과 내전 등으로 이어진 계속된 환란 속에서 대다수 평범한 중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원했던 것은 불안하지 않는 삶, 즉 생존과 안정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국가를 통합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었다. 비록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스런 시기가 있었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도 이루었

* 동서대 국제학부

다. 그렇다면 중국의 초강대국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제 중국인들이 현 체제의 붕괴를 바랄 것인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중단한다면, 중국을 연구하더니 중국공산당의 독재를 옹호한다는 비아냥을 받기 십상일 것이다. <독재의 유혹>의 저자 쉬즈위안(許知遠)이 비판하듯,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숭배한 나머지 강력한 영도자와 무소불위의 강권체제를 갈망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벨기에인 시몬 레이스가 조롱했던 식으로 말하자면 어느새 ‘속성의 중국학’을 하는 그런 아무런 상식도 원칙도 없는 중국연구자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하긴 쉬즈위안의 말대로 아직 “중국은 전제주의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기괴한 거대국가”에 불과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메가트렌드 차이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등 서구권의 책들은 중국의 굴기에 대해 환상을 심어주면서 과장된 중국모델 만들기 앞장서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책들의 저자들이 오래 중국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단편적인 내용으로 중국 이슈의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고 중국에서 환영받는 모양새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 내 일부 신좌파(신보수주의자라고 사실 불러야 할) 지식인들이 중국모델을 강조하는 것도 순수한 학술적 논의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논의 혹은 정치적 논의를 펼치기 위한 것이라는 혐의가 짙다. 그렇다면, ‘중국모델’ 논의는 중국 국내외의 기회주의적 지식인들이 중국공산당과 눈을 맞추려는 천박한 유행에 불과한 것일까? 하긴 과거 중국 공산당의 옛 지도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중국의 부상을 높게 평가하다가 현 지도부와는 관계가 예전만 못하자 갑자기 중국 정치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설파한 중국연구의 ‘대가’도 있기 마련이다.

사실 이상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갈구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가 배태한 독재의 관성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무자비한 개발의 논리를 뒷받침해왔다. 정치적 독재 하에서 부패한 권력엘리트들이 공권력으로 사익을 능수능란하게 추구하면서 민중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 가능한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물며 자유주의자들에게 부패한 독재국가는 지옥 그 자체일 것이다. 따라서 독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 권력엘리트들의 부패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일 것이다. 더군다나 스위스위안의 지적처럼 독재가 오히려 중국경제의 활력을 가져온 요인이자 ‘중국모델’의 핵심 역량으로 해석되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만하다.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자가 이러한 독재를 정당화하는 중국모델을 지지하는 것은 그래서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독재의 유혹〉만큼이나 〈시장의 유혹〉이 위험함을 공평하게 깨달아야 한다. 자유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 자유는 평등하지 않다. 시장에서 힘이 센 것은 자본의 자유이며 자본의 자유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자유마저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 논리는 자연 질서와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유 시장의 논리는 몰역사적인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시장의 논리이며 이를 자유의 정신으로 삼아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원리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시장의 유혹〉인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남미 경제의 몰락은 이러한 〈시장의 유혹〉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이며 전 세계가 주기적으로 거품경제의 늪으로 빠지는 것도 〈시장의 유혹〉 때문이다.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시장’이 현실에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각국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 역시 시장주의적인

것이였다.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적 처방 역시 결국 실패하였고 경제적 불안정성은 이제 더욱 증대된 상태이다. 90년대 초 영국이 위기에 빠지면서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97-99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번졌으며 이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위기를 거쳐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제 위기의 불씨는 다시 유럽을 거쳐 중국에서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의 유혹〉이 경제적 위기로 나타난 이후, 사람들은 시장의 논리가 현실에서의 다양한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서서히 깨닫고 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정이 붕괴하고 인면수심의 범죄와 우울증 등 각종 정신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가히 〈시장의 유혹〉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적 폭력 정도야 상대적으로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정치권력의 독재를 증오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나아가 정치권력의 독재를 극복할 대안으로 규제받지 않는 시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화자가 지극히 무지하지 않다면 의도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독재의 유혹〉의 저자는 정부권력과 시장권력 모두를 비판했노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비판하는 것은 독재권력 뿐 아니라 독재권력과 유착된 시장권력도 포함되는 것이며 자신은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상정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쉬즈위안은 시장권력 즉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예리한 필봉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가 재직했던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가 중국의 민간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언론이란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신봉하는 류샤오보

(劉曉波)는 감옥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표적인 중국의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이지만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인물이다.

현실은 사실 단순한 언술로 표현하기에 더욱 복잡하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는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목표로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정부의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장의 자유와 탈규제의 논리를 등에 업은 시장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권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시장의 확대를 야기하고 복지를 축소한 것도 중국 공산당이지만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국 인민들에게 복지를 다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주체도 중국 공산당이다. 쉬즈위안이 그토록 혐오하는 국유기업은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논리에 의해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기업이기도 하다.

중국모델은 분명히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전제주의와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천박한 자본주의가 결합된 체제는 충분히 기괴스럽고 조악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조악하다고 해서 중국모델의 독특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중국모델의 혁신 가능성을 일거에 부정할 수도 없다. 비록 현재는 기괴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검증해야 할 중국모델의 핵심 요소는 관본위의 전통 위에 시장경제를 도구적으로 확대하되 사회주의적 이상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정치경제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지 여부 바로 그것이다. 조악한 중국모델이 혁신되어 ‘사회주의시장경제’ 즉 중국의 하이브리드 경제체제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하고 중국 인민의 복지가 구현되는가 여부이며 사회주의 다당제이든 공산당의 당내 민주주의이든 인민대표대회의 실질적인 권력화이든 진실로 중국식 민주주의가 구현되는가 여부이다.

이는 추이즈위안(崔之元)의 바램대로 ‘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를 실

현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장무성(張木生)이 주장한 대로 ‘신민주주의’의 진화된 재현일 수도 있다. 중국모델의 혁신을 주창한 덩쉐량(丁學良)이 제시한 대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현재의 소수 특권층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중시장경제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국가자본주의 특히 동아시아 모델의 진화된 판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판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귀결될 수 있다.

희망적 예단은 물론 금물이다. 그러나 중국모델의 혁신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독재의 유혹〉과 〈시장의 유혹〉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불안한 나날이지만 말이다.